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의 최윤식 표미래인재연구소 소장

가계부채·부동산 한국경제 뇌관

뜻밖의 사태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이 총무공의 리더십으로 강의를 시작한 미래학자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지역이 총체적 위기라는 점을 자각하고 리더들이 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실천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금융위기에 취약한 대한민국은 2013~2016년 제2의 외환위기를 거쳐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으로 갈 수 있다”며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이유로 기존 산업의 성장 한계, 종신고용 붕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들었다.

그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은 위기를 깨닫기도 전에 파국으로 치닫는 것. 현재 불거지고 있는 시스템적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포퓰리즘 때문에 구조조정을 미루고 개인·기업·정부의 부채를 늘려가면서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계속 늦춤으로써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시나리오다.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은 지난 5일 라미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강의에서 현 경제 위기 상황을 정확히 간파하고 뜻밖의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연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성장급락·고용붕괴·저출산·고령화 등 위기 대비해야

'5년내 삼성 몰락 예측'은 대규모 혁신 필요하다는 뜻

부동산 버블의 급격한 붕괴, 정부부채·가계부채의 증가, 무역수지 흑자 폭의 감소, 기존 산업의 성장 한계로 인해 잠재성장률 급락과 종신고용 붕괴, 저출산·고령화 후폭풍, 정부의 뒤늦은 정책 등이 한꺼번에 몰리고, 여기에 더해 미국의 출구전략과 기준금리 인상을 한국의 기업과 개인이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반문한다.

최 소장은 또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한국 경제를 침몰시키는 양대 보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1150조원을 넘어섰는데 앞으로 1300조원에 다가서는 등 이미 통계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 그는 위기의 결정타는 부동산 버블 붕괴가 될 것이라며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5~7년 정도 더 하락하면서 정상 가격으로 회귀하게 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특히 모든 약재가 연쇄적으로 맞물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세간의 파장을 몰고왔던 '삼성의 몰락이 5년 안에 시작될 수 있다'는 예측에 대

한 설명도 곁들였다. 노키아나 소니와 같은 삼성보다 잘한 기업들도 모두 쇠락을 맞았는데 삼성도 비슷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잘나가는 1등 기업이 약점이 있어 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무너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모든 시장은 1등 기업에게 혁신, 그것도 대규모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이를 극복하고 있는 예로 구글과 아마존을 들었다. 일반적으로 그 분야의 1등 기업이 되면 실적 상승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들 글로벌 기업은 이러한 고점 패턴을 깨고 주가 상승을 이어가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기업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분야의 시장개척을 하고 있는데 정보 검색 포털기업인 구글이 이미 무인자동차의 사용화를 앞두고 있고, 출판분야 기업인 아마존이 검색·모바일 사업에 뛰어든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한다.

미래학자 최윤식 소장은?

미래학 분야의 권위 있는 미국 휴스턴대 미래학부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세계적 미래학자인 피터 C. 비숍을 사사했다. 최근 삼성이 몰락하고, 한·중·일 3국이 경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2030 대담한 미래'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 겸 한국 뉴욕주립대 미래기술경영연구원 원장, 전경련 전략포럼 주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미래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최 소장은 "한국·일본보다 더 빠르게 압축 성장한 중국인 만큼 빨리 거품이 꺼질 수 있다"며 "4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기 어려우며 어쩌면 영원히 G1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쇠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한 전망 역시 부정적이었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일본은 시간을 늦출 뿐 IMF 구제금융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출자·출연기관 연봉 8천만원 이상 24명

1억 이상 6명... 광발연 박승주원장 1억2900만원 최고

고액 연봉 임원들 수천만원대 업무추진비에 연금까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에서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8000만원 이상인 임원은 전체의 20% 정도인 24명이나 됐다.

6일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시 출자·출연기관 임원 106명 중 연봉이 1억원 이상은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1억2900만원), 김흥권 광주테크노파크 회장(1억1000만원), 이호준 한국 CES 대표이사(1억5000만원), 임형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1억1000만원) 등 6명이다.

1억미만 8000만원 이상은 노성재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9900만원), 김용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9800만원), 장상근 광주디자인센터 원장(9700만원),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9600만원), 유영민 광주21카부모습산업진흥재단 원장(9400만원), 오주 교통문화연구원장(9300만원), 조윤진 한국관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9000만원) 등 18명이다.

센터 사장(9100만원), 흥기남 도시공사 사장(8900만원), 이호준 도시철도공사 사장(8300만원) 등도 80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9200만원), 기업지원단장(9200만원), 자동차센터장(8700만원) 등 원장 이하 간부들도 8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8500만원), 생활체육회 사무처장(7900만원), 광주 FC 사무처장(7000만원) 등 체육관련 기관 임원들도 고액 연봉자였다.

특히 최대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임원 중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5500만원), 도시공사 사장(3000만원), 도시철도공사 사장(1800만원) 등 일부는 매년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까지 추가로 받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인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월 500만원)과 광주영어방송재단 사장(월 400만원), 5·18기념재단 이사장(월 3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월 300만원), 시장에 인체육회 상임부회장(월 300만원) 등도 매달 최고 5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직함을 무색하게 했다.

■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원 연봉 상위 10명

직책	연봉
광주발전연구원장	1억2900만원
수원에너지 대표이사	1억2500만원
수원에너지 전무이사	1억1700만원
광주테크노파크 회장	1억1000만원
한국 CES 대표이사	1억5000만원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억1000만원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9900만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9800만원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9700만원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9600만원

(자료:광주시)

임원들 출신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시청 공무원 등 공직자 출신이었다.

공무원 출신 임원들은 막대한 연봉과 관공비 외에 퇴직 후 '노르자 일자리'에다 연금까지 받을 수 있어 '3중락(三重樂)'의 효과를 보고 있다.

다만,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의 공무원 출신 임원들은 최대 50%까지 삭감된 연금을 지급받는다. 임원 임기는 통상 2~3년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수원에너지와 한국 CES의 경우 광주시가 출자를 하긴 했지만, 출자 지분이 1%에 그쳐 사실상 민영화 기업"이라며 "경쟁 간섭이나, 연봉 책정은 광주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천만원 파견수당 받고 세금 한푼 안내

안행부, 광주·전남 공무원 13억 세금탈루 900여명 적발

광주시·전남도 공무원들이 하계U대회조직위원회와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등에 파견돼 수당을 받고도 세금 13억8000만원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는 최근 파견수당

을 받고도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광주·전남도 공무원들을 적발했다.

최근 5년간 파견수당 인원만 광주시 417명, 전남도 491명에 달했다. 이들이 파견기관에서 수당을 받고도 내지 않은 근로소득세만 광주 5억3000만원, 전남 8억5000만원

이들 공무원들은 하계U대회조직위(이하 광주시),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광주세계광엑스포, 광주비엔날레, 여수세계박람회, F1대회, 국제농업박람회, 순천한국제정원박람회 등의 행사에 파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파견 기관 파세 누락 현상을 전국적 현상이었다. 이 기간 전국에서 4189명을 적발했다. 안행부는 이들이 누락한 세금이 66억2000만원(소득세 60억원, 지방소득세 6억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기간(최근 5년) 전에 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지나 파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면 '국립공원 무등산'서 계속

최근 여론수렴 등 절차도 없이 천연기념물이자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에 속하는 서석대 일원의 탐방로 정비 공사를 진행했다가 문화재청 등의 지적을 받고 중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단은 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목재데크와 전망대 공사 등을 하던 중 '서석대 훼손' 등 반대 여론에 밀려 중단되기도 하고, 시설물을 철거했다. 공단 측이 개발사업 등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단과 지역민의 유일한 협의 통로인 무등산 국립공

원 관리(실무)협의회도 발족 이후 반년이 넘도록 단 두 차례만 열렸으며, 그나마도 서석대 공사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공단은 홈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열었다. 공단은 홈페이지에 무등산의 주요 8개 탐방코스 난이도와 코스 안내를 소개하고 있는데, 옥새와 닮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새인봉을 '세인봉'으로, 무등산 대표 화강암의 외형과 닮은 일부를 '세인봉'으로, 무등산은 대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지리산 등 타 국립공원과 달리 시민과 함께 하는 산'이라며 "시민의 정서를 외면하는 운영방식을 고수한다면 거센 반발이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단 직원의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도 입설에 오르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가 "선글라스를 쓰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탐방객을 대하는 모습에 시민의 불만이 많다. 무등산 관리 관련 적연에 한해 선글라스만이라도 벗어달라"는 의견을 공단에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개인 취향에 따른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되돌아왔다.

광주에서 한 산악인은 "무등산은 대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지리산 등 타 국립공원과 달리 시민과 함께 하는 산'이라며 "시민의 정서를 외면하는 운영방식을 고수한다면 거센 반발이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임대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062) 651-6581
010-3690-7790

흑산비치호텔 매각공고

I. 개요

1. 매각대상: 흑산비치호텔 (이하 '매각대상자산')
① 매각대상: 흑산비치호텔 (이하 '매각대상자산')
② 매각대상: 흑산비치호텔 (이하 '매각대상자산')

II. 매각신청 절차

1. 인수위에서 접수
① 접수기간: 2013년 11월 7일(목) 10시 ~ 2013년 12월 6일(금) 16시 까지 (이하 '매각대상자산'으로 유관기관에 접수)

III. 소유권 이전

1. 입찰일 기준으로 매각대상자산에 대한 제반권리(가등기, 저당권, 소유권, 양도금, 유익권, 채권채무, 인건비, 채권채무, 미납 부당금(세금, 기금) 등)은 매각자가 인지하고 매수자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를 이유로 부실자를 포기하거나 계약금 해지할 수 없음

IV. 기타

1. 매각대상자산에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여 유요 경쟁이 성립하는 경우 매각이 진행됨
2. 소유권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